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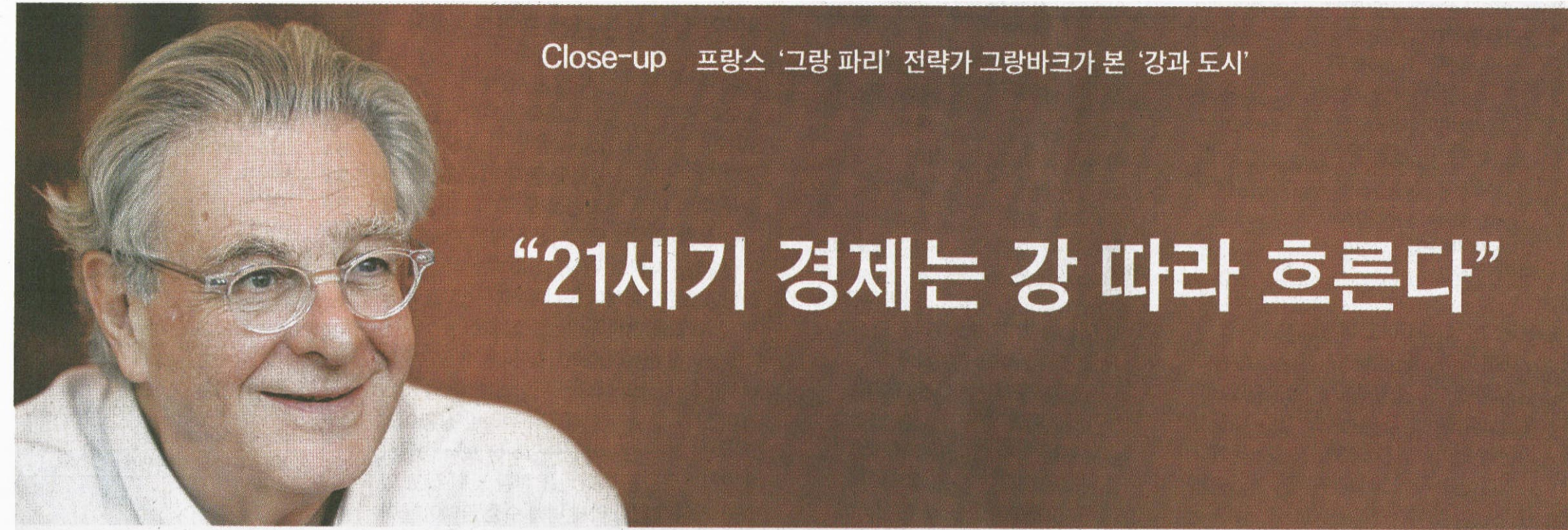


경제

중앙일보 money.joins.com

1조4000억달러

숫자 경제 미국 의회예산국이 추산한 미국의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재정적자 규모. 지난해 적자(4590억 달러)의 3배에 달한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반면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든 결과다.



“21세기 경제는 강 따라 흐른다”

한국 4대 강, 도시와 연계 위해 정비 필요... 사업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보완해야

“한국의 4대 강 정비는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21세기의 경제는 강을 따라 흐른다는 점에서 그렇다.”

8일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만난 양투안 그랑바크(67·사진) 프랑스 파리벨빌 국립건축대 교수의 말이다. 4대 강 사업이 국내에서 불러온 논란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인 평가다. 그는 이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재해 예방과 산책로 조성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강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주장이다.

4대 강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환경훼손 가능성과 22조2000억원이라

는 엄청난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도시계획 전문가인 그가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랑바크 교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그랑 파리’ 계획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다.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그랑 파리는 ‘대(大) 파리’란 뜻으로 그간 지방 육성을 위해 개발을 억제했던 수도 파리를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세계의 다른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광역도시권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랑바크 교수를 포함한 10명의 세계 정상급 건축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계획을 만들었다.

이 중 “센강을 따라 파리~루앙~

르아브르까지 200km 구간을 하나의 거대 도시권으로 만들자”는 ‘센 메트로폴’이 그의 구상이다. 이 구간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항구도시인 르아브르를 그랑 파리의 항만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랑바크 교수는 “도시에서 주변으로 뻗어가는 기존의 방사형 도시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중·과밀을 낳고 시민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갖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강을 따라 광역도시권을 육성하면 “특정 도시에 대한 집중을 막고 강이라는 환경이 여러 도시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 강 사업의 기본 목적은 홍수가림 방지다. 광역도시권 육성이란 프랑스의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그랑바크 교수는 이에 대

해 “수해의 위험을 없애지 않으면 도시가 점점 강에서 멀어지게 된다”며 “강과 도시를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게 한국 내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생태론자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어떻게 생태·문화적으로 향상시킬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랑바크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사업인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에 대해선 “물길을 내는 것 외에 주변 지역을 잘 가꾸고 복합 교통망을 갖춰야 성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벧길과 자동차 도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개

발 여지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 건설에 대해선 “인위적인 행정도시를 만드는 게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드러났듯 행정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선하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odinelec@joongang.co.kr

◆그랑 파리(Grand Paris)=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수도 파리를 초대형 선진 도시로 키우겠다고 추진 중인 사업. 200억 유로(약 34조원)를 투입해 파리와 교외 도시를 잇는 철도 노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7일(현지 시간) 프랑스 각의를 통과했으며 11월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루앙·르아브르는 센강을 따라 위치해 있다. 이들 도시를 강 중심의 광역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센 메트로폴’ 계획이다.



● 파리 일대를 방사형으로 개발한 도시 구조(왼쪽)와 센강을 중심으로 여러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는 모습(오른쪽)을 그린 양투안 그랑바크 교수의 스케치.

2011년이면 전기차 시대

2년 앞당겨 양산키로

정부는 전기자동차 양산 목표 시기를 2013년에서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전기자동차를 시범 생산하는 업체에 개발비의 50%를 정부가 대주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이때 전기자동차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며 “정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양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경쟁국의 빠른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때문이다. 일본 미쓰비시는 올 7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아이미브(i_MiEV)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미국 GM과 중국 BYD는 내년 중 양산에 들어간다. 한국이 2013년에야 제품을 내놓았다가는 시장을 선점 당할 처지다.

정부는 전기차 양산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에 관련 기술개발에 최대 88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전기차 R&D 투자액의 20~35%를 세액공제해 줄 방침이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세금을 깎아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교육세를 최대 330만원까지 깎아주고 있다.

권혁주·남궁욱 기자
woongjoo@joongang.co.kr